

민주당 특위 '공직·당직선거 최종안' 오늘 확정 정치권 관심 집중

공천·전대률 등 개혁안 담아낼까

민주당 개혁특위가 27일 공직 및 당직선거 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개혁특위의 최종안은 차기 당권 경쟁은 물론 내년 총선 공천에도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후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의 결 과정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구 후보 공천=오픈 프라이머리(100% 완전국민경선) 방안과 '슈퍼스터 K(배심원 평가)' 방식을 일부 도입(30%)할 것인지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일단, 특별 분위기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빅 3' 가운데 손학규 대표 및 정동영 최고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정세균 최고위원은 '동원'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당대회 경선률=당 지도부 선출은 전체 당원(대의원 20%, 당비당원 30%, 일반당원 50%)의 투표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다만, 호남에 편중된 당원을 감안, 지역별 보점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만 남은 상태다. 이 역시, 정세균 최고위원 측에서 당원 정비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원 투표제는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

발하고 있다.

◇여성 특례=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지역구 의원을 포함, 전체 전략 공천의 50% 할당 ▲대의원 50% 할당 ▲해당 지역 출마 경험자를 제외한 모든 여성 예비후보에 20% 가점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여성과 관련된 문제라 직접적인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남성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기=일단 특위 내에서는 총선 6개월 이전 지역위원장 사퇴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개월 이전 사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기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경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개혁안 순행하나= 27일 개혁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 도청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치권-재계 '포퓰리즘' 정면충돌

국회 "재계총수 불참시 국조 불사"… 재계 "못나간다"

정치권과 재계가 잇달아 정면충돌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 반값 등록금 정책을 놓고 한바탕 포퓰리즘 논란을 벌인데 이어 재벌총수의 국회 청문회 및 공정회 출석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재벌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도 불사하겠다고 암박하고 있지만 재계는 "출석 요구 자체가 정치권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국회 지식경제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

청회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모두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 경제단체장이 불출석할 경우 공정회를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청문회로 격상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도 한진중공업 노사갈등과 관련, 2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 연기에 이어 고발 조치 등도 불사한다는 방

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쏟아내고 있다.

허창수 회장은 지난 24일 경제5단체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견례 자리에서 "오늘날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이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재계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참 의사를 굳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당권경쟁 계파대결 치닫나

친이·반친이 대립구도 양상…오늘 광주서 비전발표회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일주일 여를 앞두고 계파 출세우기 논란이 재연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친이(친 이명박) 계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대립구도가 아닌 주류 지리를 회복하려는 친이 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반(反)친이계의 대립구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논란은 구주류인 친이계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친이계 의원은 60~70명(비례대표 포함)으로 파악되고 전체 80여명의 원의 당협위원장 중 절반 정도도 친이계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대로 친이계가 합세하면 당권을 되찾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때문에 남경필·홍준표·나경원 후보 등은 '계파경지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특정 계파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권력기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며 공작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상 구주류인 친이계를 겨냥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배후에 공

작이 있는 것처럼 흘려 편을 가르고 당 이미지를 흡집 내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반사이익을 보려는 행태"라며 "이는 한나라당이 결별해야 할 구태정지의 전형으로, 승패와 관계없이 구태정지, 협박·꼼수정지에 모든 것을 걸고 대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나라당 당권 주자들은 24일 대구시민체육관, 25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각각 지역별 비전발표회를 갖고 당신 잡기 경쟁을 벌였다. 또, 27일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제주권 비전발표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도청의혹 진상규명' 파상공세

당 최고위 "낡은 권위주의 잔재"…경찰 수사 의뢰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24일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이 26일 사흘째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 도청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과정이 확산하고 있다.

도청 의혹을 보고받은 손학규 대표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며 신증론을 보였으나 상황 설명을 듣자 급히 최고위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당 실무 직원까지 전부 퇴장한 상태에서 한 회의인데 그 회의를 도청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상임위에서 공개한 것은 의회 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금도를

벗어난 낡은 권위주의 잔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밝혀야한다"며 "민주당은 이 도청사건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인만큼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당대표실을 비롯해 국회 시설 전체에 대한 도청 여부 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도청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파문은 지난 24일 한선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가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KBS수신료 인상 합의 과정을 비난하면서 "제가 이 말씀은 처음부터 드리려하지 않았지만 어떤 최고위원회에서는…"

며 "민주당은 이 도청사건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인만큼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당대표실을 비롯해 국회 시설 전체에 대한 도청 여부 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도청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회담은) 국

민 생활을 위한 민생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 목소리와 국민 고통을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대통령-손학규

오늘 영수회담

손 "정부 를 바꾸는 계기돼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개최되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과 관련,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청와대 회담의 결과가 정부정책 실패를 인정·개선하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회담은) 국 민 생활을 위한 민생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 목소리와 국민 고통을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년 연속 예결위 배치 한나라 이정현 의원

“與호남포기 전략 포기해야”

"호남은 '일당 독주 거부'로 변하고 있는 만큼, 당이 일 만나 진정성 있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호남은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곡성 출신이면서 내년 총선에 광주 서을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인 이 의원은 이에 '한나라당 내에는 호남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없어, 누군가는 여당 내에서 호남 관련 예산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해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임한 것'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있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 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이 가능하고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독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가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 250평(30×8코너)
-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 금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립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무장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 ▶ 케모미일 23평형 37개동, 케모미일 10평형 17개동 관리동, 각각 독채형 주차장임비, 수리한증4층 객실 : 2914㎡(내부이전여부대지않음, 계약있음)
-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 실투자금 : 11억1천

모델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율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14㎡(내부이전여부대지않음, 계약있음)
- ▶